

데스크 시각



장필수 제2사회복지장 겸 편집부국장

얼마 전 대구에서 있었던 스물두 살 청년의 '부친 간병 살인'이 논란이 됐다. 뇌출혈로 쓰러진 아버지를 집에서 간병하다 음식을 주지 않아 1주일 만에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다. 1심과 2심 법원은 모두 청년에게 존속살인죄를 적용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고의성을 인정해 존속살인죄를 적용했다. 하지만 일부에선 청년이 처한 상황을 고려할 때 고의성 인정이 과연 적절한 것인가라는 논란이 있었다. 유기차사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가족 살해 후 극단적 선택 잇따라

청년의 아버지는 지난해 9월 뇌출혈로 쓰러져 8개월 동안 병원 신세를 졌다. 하지만 병원비를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해 지난 4월 23일 퇴원할 수밖에 없었다. 가족이라고는 이 청년이 유일했다. 아버지는 대소변을 가리지 못했고 욕창 방지를 위해 두 시간마다 자세를 바꿔 주어야 했다. 아들은 24시간 붙어서 간병할 수밖에 없었다. 월세는 밀렸고 가스도 끊겼다. 쌀 사 먹은 돈도 없어 2만 원만 빌려 달라고 삼촌에게 문자를 보낼 정도

간병·돌봄, 가정에만 맡겨 둘 것인가

였다. 청년은 결국 아버지를 1주일간 돌보다 포기했다. 퇴원 2주 만에 아버지는 숨졌다.

이 사건은 '영 케어러'(young carer)로 불리는 청년 간병인에 대한 관심과 함께 과연 사회안전망은 제대로 작동했는지에 대한 논쟁을 불러왔다. 가족을 간병하기 위해 꿈과 미래를 포기해야만 하는 영 케어러의 현실, 본인이 알고 신증을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한민국 복지의 '신증주의' 문제점도 노출했다.

우리 사회에서 '간병 살인'은 사후에 한 번쯤 물어진다. 간병 살인의 가해자와 피해자는 대다수가 가족이다. 중증 환자에 대한 돌봄 시스템이 부실해 경제적 능력이 없는 가정이라면 오히려 가족 구성원이 간병이란 짐을 떠안아야 하는 탓이다.

사흘 전에는 담양에서 비극이 발생했다. 40대 가장이 초등학생 아들과 80대 어머니를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다. 인천에 살면서 발달장애를 앓고 있는 10대 아들을 키우던 A씨는 1년 전 형의 사망으로 우울증을 겪는 80대 노모마저 자신이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었다. 사고 전날 홀로 사는 광주 어머니 집에 들른 A씨는 어머니와 아들을 데우고 형이 운영했던 업체 인근에서 생을 마감했다. A씨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 우울증을 겪는 어머니와 장애가 있는 아들을 돌보는 것이 버겁다는 메시지를 유족들에게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비슷한 사건은 지난해 6월 광주에서도 있었다. 20대 발달장애인 아들을 키우던 50대 '싱글 맘' B씨가 주차된 차 안에서 아들과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다. B씨는 코로나19로 인해 주간보호센터가 폐쇄되면서 집

에서 아들을 돌봐왔다. 그러다 아들이 내는 소음 등으로 이웃들의 항의가 잦아지자 고심 끝에 정신병원에 3개월 입원시켰지만 아들이 적응하지 못하고 몸무게가 10kg 이상 줄어들자 죄책감에 퇴원시켰다. 하지만 돌봐줄 복지시설을 찾지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공공 시스템 갖춰 비극 막아야

'간병 살인'이나 '돌봄 살인'은 어떤 이유에서도 용서받을 수 없다. 돌보는 사람의 그릇된 책임감에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소중한 생명을 빼앗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이들을 비난만 할 수도 없다. 비난에 앞서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해 사회가 이들을 돌볼 수 있는 복지시스템을 점검하고 제대로 갖추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개인이 모여 가정이 되고 가정이 모여 국가를 이룬다. 지방자치단체나 국가는 개인과 가정을 돌볼 책임이 있다. 한 가정에서 구성원의 생명권과 복지권을 쟁길 수 없다면 지자체나 정부가 나서 공적으로 돌볼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그런 점에서 지난 6월 광주 방림동에 문을 연 전국 최초의 '최중증 발달장애인 융합돌봄센터'는 하나의 본보기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광주시가 마련한 복지 지원 체계인데 센터에서 행동치료사 등 전문가들이 발달장애인들을 연중무휴 24시간 돌보는 시스템이다. 이런 시스템이 많이 갖춰질수록 간병·돌봄 살인 같은 안타까운 비극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bungy@kwangju.co.kr

은편칼럼



박홍근 포유건축 대표·건축사

지속 가능한 도시의 조건

되고 그 과정에서 학습이 이뤄지고 문명의 발전이 이뤄진다"고 했다.

우리는 지금까지 누려왔던 도시 환경과는 다른 상황에 놓여 있다. 늘어나기만 했던 인구가 감소하는 시대에 살고, 늘 접촉하며 살았는데 언택트(Untact)를 강요받는 사회가 되었다. 역사적으로 전염병은 인류 역사의 흐름을 바꿨는데 지금이 그때이다.

인구 감소, 고령화, 친환경, 기후위기, 언택트, 인접성, 거리 두기, 고밀, 워드 코로나 등등을 어루만지고 해결하면서 살만한 도시를 만들어야 할 때다. 이를 위한 몇 가지 제언을 나누고자 한다.

첫째, 장수명 주택을 짓자. 수명 100년을 목표로 일반 주택보다 더 튼튼하고 유지하기 쉬운 주택으로, 내구성과 가변성, 관리 용이성을 갖춘 주택을 짓자. 주거 공간의 다수를 차지하는 아파트를 장수명 주택으로 짓자. 내부에 녹지 공간도 도입하고, 높은 천정을 확보하여 누가 살더라도 자신의 취향에 맞게 공간 변화를 줄 수 있도록 하자. 시대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집, 오랫동안 머물러도 자연의 다양한 변화를 느낄 수 있는 집, 여러 세대 동안 변화를 주며 살 수 있는 집이 가장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주택이다.

둘째, 공원을 만들고 연결하자. 집 근처에 큰 공원이 아니라도 썬지공원, 가로형 공원들을 많이 만들자. 근대 도시에 등장한 도시공원의 개념은 도시의 희생자들, 농촌으로부터 이주해 도시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노동자들에 대한 복지와 구호를 제공하기 위한 발명품

이었다. 물리적 거리 두기와 힐링에 필요한 다양한 형태의 녹지 공간을 많이 확보하자. 공동주택 단지 간의 경계를, 주변 도로와의 단절을 없애서 누구나 사용 가능한 공원 역할을 하도록 하자. 워드 코로나 시대 도시공원과 주변의 열린 작은 녹지 공간을 시민들에게 제공되는 '녹색 복지' 장소가 될 것이다.

셋째, 집중화·고밀화하자. 도시를 팽창시키지 않고 공간적으로 압축된 형태로 개발하는 컴팩트시티로 조성하자. 도시 공간을 고밀·복합적으로 이용함으로써 통행 거리를 줄여 자원 절약과 환경 오염을 감소시키고, 난개발로부터 토지 자원을 보존하자. 일지리와 지역 서비스 등 일상생활의 접근성을 높이고 커뮤니티를 활성화하자. 이는 도시의 경쟁력이다. 특히 인구 구조의 변화에 대응하고, 인간의 본성인 '인접성'을 담은 도시가 되도록 하며, 개발되지 않은 곳은 다음 세대를 위해 남겨 두자. 지금의 우리가 도시의 주인인 것처럼 모두 개발하려고 하지 말고, 잠시 머무는 손님임을 명심하자.

세상이 달라지고, 생각은 변하고, 제도는 이를 뒤따른다. 생각의 산물인 제도에 의해 도시는 달라진다. 지속 가능한 도시와 살터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공동주택의 면적 계산, 이격 거리, 세금 혜택, 금융 지원, 택지 개발 방법 등등. 기존의 것에서 대전환을 꾀하자. 도시는 유기체다. 우리가 사는 이 도시가 잘 성장하여 지속 가능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남다른 생각으로, 제도를 만들고, 실천하여 많은 사람이 살고 싶어 하는 도시를 만들어 보자.

기고



조귀임 전 초등학교 교사

농부들이 가꾼 황금보다 귀한 쌀

논길을 누볐다. 메뚜기가 병에 가득차면 냇에서 함께 자란 피를 뽑아 그 줄기에 메뚜기를 꿰어서 집으로 달려가곤 했다. 메뚜기를 솥에다 넣고 소금이라든 기름을 넣고 볶으면 고소한 그 맛이 천하일품이다. 지금도 그 맛을 잊을 수가 없다. 지금은 농약을 남용해서 논에서 우렁이, 메뚜기, 미꾸라지를 찾아보기가 힘들다. 그저 소중한 추억으로 간직할 수밖에 없어서 아쉽다.

시골 학교 근무 시절, 농번기에 동료 교사를 돕기 위해 전 직원이 동원돼 모심기를 했는데, 교장 선생님과 나는 못줄을 잡는 역할을 했었다. 박이 놓은 못줄 막대기를 옮기기가 힘들어 어깨랑 허리가 아파서 죽는 줄 알았다. 많은 직원들이 회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논세 마지기에 모를 금방 심고 나니 사모님과 동네 아주머니들이 빨간 고무 합지박 가득 정성스레 음식을 장만해서 논으로 가져왔다. 보리 섞인 밥, 돼지고기 김치국, 생선찌개, 삶은 닭, 김치, 젓갈, 나물, 상추, 된장, 장아찌, 마른 새우 무침 등 진수성찬이었다. 그중에서도 땀을 식혀 줄 막걸리와 식혜가 인기였다. 논에서 먹는 못밥은 별미였다.

우리 조상들은 왜 영농 조건이 까다로운 쌀농사를 고집하며 모든 농사의 근본으로 삼았을까. 기후와 풍토가 벼농사가 잘되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단위 면적당 생산량도 다른 곡물들의 추종을 불허해 부양 능력에는 쌀 만한 재료가 없었던 것이다. 무

엇보다 쌀의 식미적 가치를 빼놓을 수 없다. 쌀로 지은 밥은 담백해 매일 먹어도 싫증 나지 않고 떡이나 술 등 다양한 식품을 만들기에 적격이라한다. 모든 곡물 중 가장 훌륭한 탄수화물 공급원이면서 여러 영양소들이 이상적으로 배합된 주식이다.

한자 쌀 미(米) 자를 풀어보면 '팔(八)+십(十)+팔(八)'자로 이뤄져 있다. 쌀을 생산하기 위해 88차례 농부의 손길이 보태진다는 의미라고 한다. 소나 경운기로 논갈이한 후 모판을 만들어 모를 기르고, 손이나 이앙기로 모내기를 마치면 거름 주기와 물관리를 계속하고, 제조와 농약 살포로 풍년 농사를 기원한다. 벼 베기와 탈곡이 끝난 후 정미소에서 도정을 하면 비로소 일년 농사가 끝나서 농부들이 허리를 뽐 수 있다. 그동안 비가 너무 많이 와도 걱정, 비가 안 와도 걱정, 폭염과 가뭄·홍수는 농사에 치명타이다. 농부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진리를 따르는 정직한 사람이다. 씨를 심고 가꿔 뿌린 만큼 거두는 농부는 헛된 욕심을 갖지 않으며 농부의 마음(농심)이 곧 하늘의 마음이라고 했다.

이렇듯 황금보다 더 소중한 쌀이기에 쌀을 푸다가 한 톨만 떨어져도 나는 일일이 주위 담는다. 탐과 정성으로 가꿔 낸 황금보다 귀한 쌀을 귀히 여기며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은혜로운 농부들의 노고를 잊지 않았다.

社說

어린이보호구역에 주정차를 허용해 달라니

광주시교육청이 시행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주정차 전면 금지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보여 비난을 사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법 개정에 따라 지난달 2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가 전면 금지된 이후 관련 민원이 빗발치자 유치원·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스쿨존 내 '승하차 구역'(드롭존: drop zone) 설치 신청을 받고 있다.

드롭존이란 어린이보호구역에 표지판을 설치해 표시된 시간 동안 자동차가 주정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접수 결과 광주 지역 유치원·초등학교 301곳 중 40%에 가까운 117곳이 신청했다. 또한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승하차를 허용해 달라는 요구가 많다.

이에 대해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 모임'은 "낮 시간 내내 스쿨존 내 주정차를 허용해 달라는 이러한 요구는 사실상 법 개정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특례 조항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통학 버스 등에 타고 내릴 수 있도록 전용 정차 구역을 만들어야 한다면, 어린이들이 승하차하는 등하교 시간대에 한정해야 마땅하다는 것이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가해자에 대한 가중 처벌과 속도 제한(30km), 과태료 인상 등을 골자로 한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 1년 8개월이 지났다. 하지만 법 시행 이후에도 스쿨존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스쿨존 주정차 전면 금지는 그 후속 조치로 도입됐는데, 보완 장치인 승하차 구역을 무분별하게 설치하는 것은 되레 크고 작은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승하차 구역은 꼭 필요한 곳에, 제한된 시간만 운영해야 하며 관련 시설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설치돼야 한다.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들의 안전 문제는 유별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고 예방에 역점을 두고 철저히 대처해야 마땅하다.

유류세 내렸는데 휘발유 값 인하 왜 늦어지나

정부의 유류세 20% 인하 조치가 지난 12일부터 내년 4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이에 따라 1l당 1800원대까지 치솟았던 광주·전남 지역 휘발유 가격은 3%가량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지난 14일 기준으로 보통휘발유 주유소 평균 가격은 1l당 광주 1734.0원 전남 1739.51원으로 전남보다 각각 6.1원과 6.66원 내렸다. 국제유가 급등 영향으로 광주 휘발유 가격은 7주 연속 고공행진하다가 이달 10일 1800원을 넘긴 바 있다. 기름 값은 개별 주유소가 결정하기 때문에 유류세 인하분이 반드시 100% 소비자 가격에 반영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유류 구조상 일반 차량 주유소 판매 가격에 반영되기까지는 1-2주 시차가 발생하게 된다.

애초 유류세 인하분이 소비자 가격에 그대로 반영된다 가정하면 1l당 휘발유는 164원, 경유는 116원, 액화석유가

스(LPG) 부탄은 40원씩 내릴 것으로 기대됐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휘발유 기준 164원의 유류세 인하분을 지난 12일 즉시 인하한 곳은 전국 765개 정유사 직영주유소와 1233개 알뜰주유소였다. 정부가 이들 주유소에 대해서는 재고분까지도 곧바로 유류세 인하분을 가격에 반영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나머지 일반 주유소들인데, 과거에도 제때 인하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 소비자들의 불만을 산 바 있다. 물론 전국 주유소 단체인 한국주유소협회는 '최대한 빠르게 인하분을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결코 빈말에 그쳐서는 안 될 것이다.

더욱이 지금은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가 역대 최대 폭으로 유류세를 인하한 것은 서민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한 것인 만큼 주유소 가격에도 하루속히 반영돼야 한다. 일반 주유소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절실하다.

無等鼓

요즘 신문·방송 매체를 통해 '기후변화'와 함께 '탄소중립'이라는 용어를 자주 접하게 된다. 정부도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해 30여 년 후인 2050년까지 탄소 순배출량을 0%로 줄이겠다는 '탄소중립 2050' 계획을 발표했다. '탄소중립' 개념은 전반적 산업뿐만 아니라 얼핏 동떨어져 보이는 여행·캠핑 등 생활 속에도 적용될 수 있다.

최근 여수 굴전 캠핑장에서 '탄소중립 캠핑 캠페인'이 있었다. 전남관광재단 주최로 캠핑장을 찾은 가족단위 캠핑족을 대상으로 전북 샐러드와 감성 향초 만들

힐링하고자 하는 캠핑 인구가 부쩍 늘었다. 승용차를 숙박 공간으로 활용하는 '차박'(車白) 문화도 확산되고 있다. 풍지 좋은 곳에 자리한 캠핑장마다 주말이면 텐트가 빼곡하게 들어선다. 그렇지만 '탄소중립' 관점에서 바라보면 다소 아쉬운 점이 있다. 삼겹살이나 생선은 가스불이나 숯불에 굽거나, 화로에 나무 장작을 넣고 모닥불을 피워 '불멍'(불을 멎히 바라보는 행위)을 즐기는 캠핑 문화다. 과거와 비교하면 확실히 고성방가(高聲放歌)는 줄어들었지만 화

무탄소 여행

석 연료와 전기 사용은 오히려 늘었다. 자동차로 여러 지역을 샐러드로 감성 향초 만들기, 친환경 비누 만들기 등 다채로운 내용으로 진행됐다. 여기서 눈에 띄는 것은 화석연료나 1회용품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지역에서 생산된 해산물을 식재료로 삼았고, 버려질 전복 껍데기마저 초를 담은 용기로 재활용했다. 또 비누를 만드는 틀은 플라스틱 대신 고무 재질을 사용했다. 중요한 사실은 지역에서 생산된 로컬 푸드를 식재료로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탄소중립'에 일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으로 자연 속에서

/송기문 문화2부장 song@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 (지사 지국 (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4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52	체육부 220-0621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42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